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법안서]

15차시. 영업비밀보호법의 요건과 의문점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u>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u>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

▶ 학습내용

1.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요건
2. 영업비밀보호법상 의문점

▶ 학습목표

1.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의 위계 파악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 체계로 작성해 주세요.

II. 영업비밀 종류와 요건(2)

(3)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 요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노하우(Know-how), 재산적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mation), 산업비밀 또는 기업비밀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며, 그 범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¹⁾.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속하는지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미국의 1939년 제1차 불법행위재록 제757조 평론 b는 ① 어떤 정보가 그 소유자의 경영외부에 알려진 정도, ② 어떤 정보가 직원 또는 경영과 관련있는 사람에게 알려진 정도, ③ 그 소유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정도, ④ 그 소유자와 경쟁자에 있어서의 그 정보의 가치, ⑤ 당해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한 노력 또는 비용의 정도, ⑥ 당해정보를 정당하게 획득 또는 복제하는데 곤란한 정도를 들고 있다.

영업비밀의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²⁾”고 판시하고 있

1)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영업비밀 보호에 관하여 세계 각국 및 국제조약에 가장 영향을 끼친 미국 영업비밀 관련 법률도 1979년 통일영업비밀법 제정시 1939년 제1차 불법행위 재록에 규정된 “경영(in one's business)”이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생략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방법을 구비하지 못한 정보도 영업비밀의 정의에 포함시켰으나(1979년 통일영업비밀법 제1조 평론 참조), 1995년 제3차 부정경쟁방지법 재록 제39조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다시 “경영(a business or other enterprise)”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와 국가기밀은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다.

2) 대법원 1999. 3.12 98도4704 판결, 대법원 2003. 1.24 2001도4331결정, 대법원 2003. 7.16 2002마4380결정

다.

1) 비공지성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 이어야 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당해 정보의 보유자는 당해 정보가 비밀상태(비공지성)이기 때문에 동 정보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향유한다.

그러나, 비공지성 내지 비밀성은 상대적 개념으로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자와의 사이에 비밀준수의 의무가 형성된 경우라면 비공지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³⁾,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비공지 상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비밀로 유지·관리하더라도 이미 그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비공지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규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이는 특허법상의 신규성의 요건⁴⁾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떤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동업자들 사이에 새로운 것(신규성)으로 평가받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공지성은 영업비밀의 기본적 속성이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기본 출발점이다.

영업비밀 소송에 있어 비공지성의 판단시점은 법 제10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는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이며, 법 제1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행해진 시점이다.

비공지성의 입증책임은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3) 95나14420 판결(서울고법 1996.2.29. 선고)에서 “영업비밀은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4) 특허법상 신규성이란 어떤 발명이 그 출원 시점에서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 사상이어야 함을 말하며, 특허법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을 신규성 상실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비공지성의 성격상 문제의 정보가 일반적 경로로는 입수될 수 없고, 피고가 당해 정보를 획득한 경로(피고의 종업원이 원고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실 등)와 피고의 영업비밀이 원고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 등을 입증하면, 그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피고측에서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공지성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 또는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지만⁵⁾, 외국기술을 수입·개량하여 비밀로 관리해오고 있었다면, 그 기술은 영업비밀에 속한다⁶⁾고 판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비공지성과 관련하여 역설계, 비밀 조합방법에 대해서는 비공지성이 훼손되지 않지만, 국외 공지와 관련하여 비공지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먼저 역설계에 대해서는 법원은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라고 판시를 통해 비공지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공연히 알려진 정보의 조합일지라도 그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한 쪽 업체의 정보가 다른 경쟁사의 정보에 대하여 우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외 공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 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5) 서울지법 1997. 2. 14. 96가합7170 판결

6) 서울지법 1995. 3. 27. 94가합12987 결정,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94가합12987 결정에서 법원은 “신청인은 1969. 9. 22.경 미국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1972년경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1991. 3. 2.경부터는 이 사건 제품의 생산기술을 개량하기 위하여 일본의 아사히화학공업(旭化成工業) 주식회사로부터 별도의 기술 및 촉매를 도입하는 등 이 사건 제품의 생산기술을 해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입하고 이를 개량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 및 각종 부산물인 청화 소다, 유안 등의 제품 생산에 관한 별지목록 기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으며, 96다31574 판결에서는 “일반적인 경화제를 생산할 수 있는 화학식은 공개되었으나, 우수한 품질의 경화제를 생산하는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고 비록 5년간의 기술독점금지 계약은 끝났으나, 원고회사는 일본의 삼건화공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제조기술을 수입한 이래 계속 연구·개발하여 우수한 품질의 경화제를 생산하여 국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동 기술을 비밀로서 관리해왔으므로 그것이 공지의 것이 아닌 이상 개발시기나 도입시기가 오래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지법 96가합7170 판결)”라고 비공지성이 훼손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비공지성 대표적 판례>

2002다60610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2008도679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아텔로콜라겐 제품개발 관련자료, 제조 및 생산 관련자료, 채권자 제품에 대한 인·허가 관련자료, 실험 및 연구자료, 설비구축자료, 제조기록서, 규격서, 제조관리방법서, 시험기록서, 품질경영계획서, 유럽인증 자료, 의료기기 허가신청 자료, 특허출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채권자만의 제조방법으로 보이는 이 사건 기술정보 및 그와 관련한 세부 실험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제조기록서 등 기술 및 품질에 관한 문서가 다

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직접 실험과 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자의 아텔로콜라겐 제조 기술이 개별적으로 선행 문헌에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공지된 기술이 조합된 일련의 제조 공정은 선행 문헌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아텔로콜라겐 제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험 조건과 방법 같은 기술상의 정보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기술파일에 담겨 있는 위와 같은 자료들이 웹사이트나 논문 등 간행물에 게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보유자인 채권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0733 판결

[손해배상(기)]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자료는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설계자료들은 원고가 보유한 대용량 화력발전소의 설계와 관련한 노하우, 기술, 경험이 집적된 서류로서 일반에게 공개되었거나 공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설계자료 중 일부가 발전소 건설,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부 협력업체에게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동종업체나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보유자인 원고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영흥 3, 4호기 계약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지식이용등 조항’ 제1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후속호기 설계용역사에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설계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상업상·공업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는 영업비밀보유자가 시장에서 특정

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⁷⁾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당해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쟁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현실적·잠재적 우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우위는 필요하지 않는다⁸⁾.

실제 영업비밀 소송 중에서 당해 정보가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미국 법원은 영업비밀보유자가 당해정보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 노력, 비용 등을 투자했다면 비록 이러한 투자가 항상 경제적 유용성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모나미 사건에서 오랜 기간 시간, 비용, 노력 등을 투입하여 개발한 필기용 잉크는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고⁹⁾, 경제적 가치 판단기준으로 대법원의 2001도 4331판결을 보면, ① 이 사건 다심관 생산공정은 이미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각 공정의 생산기계는 전문제조업체의 납품을 받아 당해 공장 구조에 맞게 배치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계 배치 도면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일일 생산량과 월생산량은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관련 업체들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한 회사 소개시 자사의 생산량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자체가 정보 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심관 생산설비 중 일부인 권취기와 파이프 보관틀은 기계업자들이 용이하게 그 제작·개선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설비로서 그 제작방법이 비공지성을 지닌 기술이 아니며, 가사 ○○이 작업 편의를 위해 위 설비에 일부 개선을 하였더라도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가

7) 예를 들면, 장기간 특정기술의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결과 당해 기술의 실현불가능이 판단된 정보는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미국 1985년 통일영업비밀법 제1조 평론).

8) 1995년 미국 제3차 부정경쟁방지법 재록 제39조 평론 e.

9) 대법원 1996. 12. 23. 96다16605 판결

치의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접근 가능성, 정보 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 등을 들고 있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는 영업비밀의 양도 또는 라이선스의 근거가 되고,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았을 경우 민사상·형사상 訴因이 되지만¹⁰⁾, 경제적 가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구비하지 못한 정보라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¹¹⁾.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장래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실패한 실험 데이터 등 소극적 정보(negative information) 등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 할 수 있다. 특히 ‘실패한 실험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실패한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여 사용할 때에는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더 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그로 인해 경제적 유용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단지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일부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 비공지성이 유지된다면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유용성 관련 대표적 판례>

2001나2291

채권자가 수년에 걸쳐 인원과 자금을 투입하여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권선기의 권선을 감는 속도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회사의 권선기에 비하여도 월등히 빠른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2001나1142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의 영업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서 원고 회사는

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8조

11) 예를 들면, 비자금 생산 및 관리방법, 탈세방법, 공해물질의 배출방법 등의 반사회적인 정보

그 개발을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기술이 전과 개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보의 보유로 인하여 경쟁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

2002가합10672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실험과 평가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인 도금조건을 산정하는 등 그 선정에 상당한 노력, 비용과 시간을 들인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2005가합2591

한편, 영업비밀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의 유무료 사이트를 통하여 수집된 것이고, 그러한 자료수집방법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인력 관리 업체들도 널리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 회사의 정보력이나 노하우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수집된 각 자료에 원고 및 이 사건 회사 직원의 가공행위가 특별히 부가되어 원자료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거나 증가한 것이 아닌 사실은 영업비밀의 독립성을 부정하게 한다.

2000가합54005, 2003카합3352

소극적인 정보, 즉 장기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 연구 및 실험결과를 통하여 어떤 공정이 유용하지 않다는 정보 역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험을 생략하여 연구개발비를 절약하는 등으로 사업 활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005도6223 판결

- 1) 영업비밀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 3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
-

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판시 각 자료들 중 일부는 피해회사가 연구·실험한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백색 발광다이오드(White LED)의 제조를 위한 부품, 원료의 배합비율 및 제조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피해회사가 시제품 품질을 확인하거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기재한 자료인 바, 위 자료들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도6576 판결

1) 이 사건 각 회로설계도면에 담긴 온도보상회로도를 비롯한 정보는, 그것이 CSTN LCM 제작의 핵심 또는 첨단기술에 해당하여 그 도면의 유출로 피해회사 기술경쟁력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업체의 엔지니어로서는 같은 종류의 CSTN LCM을 개발, 제조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해 회사로서는 이 사건 각 회로설계도면을 포함한 CSTN LCM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며, 침해자 개인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고, 반출증 제도와 산업보안관리규정을 시행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만약 유출될 경우 적어도 경쟁사가 동종 품목을 개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등에 기여할 만한 정보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회로설계도면에 담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477 판결

1) 회로도란 부품의 배열, 부품의 연결, 부품의 규격과 전기적 수치 등을 공인된 기호를 사용하여 단면에 표시한 도면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해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회로도 상에 담긴 위상제어기능을 통하여 발진 위치를 현 통화대역에서 다른 통화대역으로 이동시켜 발진을 제어하는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부정되지 않는다.

3)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공지 상태의 기술·경영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즉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객관적으로 제3자 또는 종업원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비밀임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당해 정보가 “상당한 노력”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① 당해 정보에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경우
- ②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그 정보를 사용·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③ 당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공간적·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

그러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는 물적인 매체(서류, 디스크, 필름 등)에 체화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에 의한 것도 있으므로 영업비밀 주체의 업종, 규모, 종업원의 수, 정보의 성질과 중요성, 비밀침해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당해 정보가 비밀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단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비밀관리성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원고 회사는 이러한 영업비밀 중 핵심기술을 문서화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한편 1992년 8월경에는 피고를 포함한 거의 전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간은 위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원고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한 사실¹²⁾”있어 비밀관리성을 인정했으며,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은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 회사의 연구소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이 있고, 원고 회사는 공장 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을 총책임자로 정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으로 비밀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¹³⁾”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영업비밀이 정보이고 점유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시제도가 없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이익과 허가를 얻지 않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정보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¹⁴⁾.

<비밀관리성 관련 대표적 판례>

2008도3435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보안관리 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볼 수 없다.

2006고단4808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같은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 서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한,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각자 그 접근 권한에 따라 고유의 식별

1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1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4) 1995년 미국 제3차 부정경쟁방지법 재록 제39조 평론 g.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접근 및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접근이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로그기록을 남겨 누가 언제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를 사후에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안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 그 담당자의 사전 허락에 의한 접근만 허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비밀준수 서약서를 징수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직원들이 언제든지 회사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소스코드와 같은 개발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용 저장장치에의 복제도 자유롭게 허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단순히 비밀준수 서약서를 징수하는 이외에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기업규모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관리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2006가합17631

‘무단복사’, ‘이 문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출력자에게 있습니다’, ‘대외비’ 등을 기재하여 놓은 사실만으로는 기술 정보를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기술정보에 관한 문서나 설계도면 등을 개발자들의 책꽂이에 바인더로 꽂아 놓고 회사 밖으로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밀로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

2004가합10118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약서를 받는 외에 핵심기술을 문서화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거나, 연구소에 관계자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구실 관계자들에게 연구결과 등이 모두 공개되고 별다른 접근 제한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술정보가 객관적으로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 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2000가합1798

금형을 개발, 보관하는 금형개발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 책임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금형수불과 관련하여도 장부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금형의 외부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형에 대하여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관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제조기계도 피고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형과 제작기계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006고단1831

피고인이 A회사를 퇴사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서 위 각 모델 관련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기재한 후 재직중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퇴직원 제출 즉시 회사에 반납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B에서는 위 각 자료들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여 왔고, A역시 B와의 기밀누설방지협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영업비밀로 관리하도록 교육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각 자료들은 휴대폰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서 관리되는 것이다.

2001도4331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의 기계 배치, 생산량, 부품의 규격 등을 포함하여 그 생산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각서/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생산공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행한 적이 없다면 영업비밀로서 관리한 것이 아니다.

2005노244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회로도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서, 각서,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의 회로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피고인들 중 일부가 입사할 때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직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하여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노1053 판결(확정)

이른바 '헤드헌팅' 전문회사에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퇴사 직전에 회사 데이터베이스(DB)에 담겨있는 개인이력 및 신상정보 등 인재 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한 사안에서,

① 이 유출된 자료에는 업무분야별로 구분된 수백명 분량의 구직자 이력서 등이 들어 있고, 위 인재 정보에는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인맥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② 일부 인터넷 유료 정보서비스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인재정보도 있으나 이를 수집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 특징, 이직사유, 적합한 업무영역 등 세부적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회사의 양식으로 재작성하였고, 유출된 인재 정보는 헤드헌팅 회사 영업을 위한 핵심적 정보로서

이러한 자료가 경쟁업체에 넘어가는 경우 막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③ 위 인재정보 DB는 회사 대표가 자신의 노트북에 담아 보관·관리하면서, 대표와 이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의 영업비밀관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징구하여 왔고, 피고인도 재직 중 및 퇴직 시에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재정보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직원 병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컴퓨터를 켜고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피해회사 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다른 직원 병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병은 이 사건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여 사무실 내의 서랍에 보관해 두었는데, 병이 그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 CD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 16. 선고 2009가합41286 판결

1) 이 사건 영업자료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영업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등 비밀관리성의 요건까지 충족하여야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2) 원고는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직원들에게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원고는 원고 소속 직원들인 피

고들에게 ‘보안규정 서약서’에 서명토록 하여 이를 제출 받은 사실, 원고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USB사용제한 등의 외부저장장치 제한정책, 영업비밀의 분류·관리를 위하여 개발이력 관리시스템, 문서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보안인증서에 의하여 접속하는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프린터출력물 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원고의 연구소에서는 연구원이 노트북을 반출할 경우 엄격하게 사전 승인이 요청되고 있으며, 원고의 영업기밀 문서는 별도의 문서보관실 캐비닛에 보관 후 시정장치를 통해 개폐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에게 원고의 보안 인력경비를 맡긴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보안관리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 영업자료가 비밀로 분류되었다거나 이 사건 영업자료에 그와 같은 표시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문서를 자료, 문서, 도면, 사진으로 구분하여 대외비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영업자료에 관하여는 어떻게 분류 및 관리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서약서상의 기밀유지조항은 원고가 그 직원들에게 일반적·추상적인 기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정보성

영업비밀은 전술한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며, 이러한 정보로서 미국 통일영업비밀법 제1조 제4항은 비방(formula), 설계(pattern), 편집물(compilation), 절차(program), 장치(device), 방법(method), 기술(technique) 또는 공정(process) 등을 예시하고, 방법(method)과 기술(technique)에는 노하우(know-how)의 개념도 포함된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⁵⁾.

정보성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반드시 특정한 매체에 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정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정당한 타인의 기술적·경영적 정보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유출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제도이므로 고정성은 논할 의미가 없다.

(4)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성’의 중복 혼란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TRIPs협정, 일본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영업비밀의 개념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비록 다소 표현이 상이하지만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가치성, ③ 비밀관리성인 세 가지 요건들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의 정의가 “i)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ii)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iii)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임을 볼 때 일본의 그것을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참조하면서도 ② 경제적 가치성 요건 부분에 관하여는 일본의 ‘유용성’이란 표현 대신 미국의 ‘독립한 경제적 가치성’란 표현으로 대체하여 입법하였다. 여기서 문제점은 ③ 요건을 정의하는 문구에서 일본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유용한’이라는 표현까지 삽입한 점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법의 정의에서는 미국의 ‘독립한 경제적 가치’란 표현과 일본의 ‘유용한’이란 표현이 함께 규정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이것들 모두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라는 견해 또는 중복규정이라는 취지에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이질적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실제로 양자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우리법의 개정에서는 혼란성을 야기하는 용어를 통일하여야 하겠지만 ‘유용성’ 보다는 ‘경제적 가치성’이 을 삭제하자는 분석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입한 WTO/TRIPs협정문에 보다 가까운 표현이므로, ‘유용성’ 대신 ‘경제적 가치성’으로 통일하는게 것이 좋을 듯싶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유용성’ 대신 ‘경제적 가치성’ 위주로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¹⁶⁾

15) 미국 통일영업비밀법 제1조 평론.

16)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139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

(5) ‘판매방법’ 예시의 타당성 여부

우리법의 정의조항에서 ‘생산방법, 판매방법’을 영업비밀의 전형으로 예시한 것은 일본법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그 중 ‘판매방법’은 실제 영업비밀의 양상을 고려할 때 대표성을 가진 좋은 예시라 할 수 없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업비밀의 보호가 현실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대기업 종업원이 부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주로 회사의 핵심기술 혹은 고객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누설하는 것이다.¹⁷⁾ 판매방법은 실제 기술정보가 아니라 경영정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매방법은 실제 판매와 관련된 가령 고객 명단과 같은 고객정보, 상품정보, 기업정보 및 판매 교육자료, 판매 안내책자, 판매 할인/프로모션 프로그램 등 전형적인 경영정보에 관련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매방법’보다는 ‘판매정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용어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유용성은 어느 정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인 독립한 영업적 가치로서,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그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판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혹은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쟁상의 지위를 제고함에 도움이 될 때, 또는 그 정보의 취득, 사용에 있어 대가나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혹은 그 정보의 독자적인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때, 문제의 정보는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제1조 제4항에서도, 영업비밀은 “제법(formula), 패턴(pattern), 편집물(compilation), 프로그램(program), 장치(device), 방법(method), 기술(technique) 또는 과정(process)”을 포함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17) 핵심기술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8. 선고 2007가합28982 판결; 고객정보에 관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고단21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노1252 판결 등.